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독자지원금 344-21 한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음 1월 25일) 제15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국민의당 전북 예비후보 공천면접 '주목'

9일까지 실시... 13일 결과 통보
신인 25% 등 가산점 부여키로
도내 정가 "도덕성이 가장 중요"
비위전력·기소자 등 배제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전북지역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면접을 보는 등 총선 시동을 걸었다.

또 오는 9일까지 면접을 마치고 13일 결과 통보와 함께 최소한 14일부터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경선 방식은 숙의배심원제, 숙의선거인단제도, 안심번호여론조사 등이다. 숙의배심원제는 중앙당 선관위가 권역별로 지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배심원을 구성한다.

배심원들은 후보자들의 입장, 가치관, 정책 성 등을 검증해 배심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다.

숙의선거인단은 안심번호 랜덤으로 지역유권자의 일정한 수를 추출, 그 유권자가 현장에서 정책 토론을 듣고 후보자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숙의선거인단은 현장에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선출하는 현장성을 갖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제, 지역구 상황, 후보자의 수와 후보자 경쟁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신인 25%, 여성 10%, 장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 중복해당 될 경우 가장 큰 항목을 기준으로 따르기로 했다.

예컨대 경선할 경우 여성 후보가 40% 득표했다면 10점이 아니라 10%인 4점이 더해져 44점을 받게 된다.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면접에서 도내 예비후보들을 어떻게 추려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북지역은 3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다.

도내 정가는 도덕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창당대회에서 부패혐의로 기소돼 유죄확정을 판결을 받으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는 당원권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당헌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공직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비위 전력이 전혀 없어야 되고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당이 도덕성을 강조하고 예외없이 비위전력자 및 기소자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키로 한 것은 예외 규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두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가운데 원주무주진안장수 출마가 예상되는 A 예비후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A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A 후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자격심사에서 '폭력 및 알선수재 처벌 전력'에 근거 부적격자로 확정 받았다.

A 후보측 관계자는 "입당서를 제출할 당시 충분히 소명을 했고 중앙당에서 공감대를 형성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불합리하지 않고 공평하게 평가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명영 기자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시민 활동가들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들어보고 있다.

및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인 '더불어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산시민도 더불어 잘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자 한다"며 "과도한 대기업의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은 우선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에만 철화해도 얼마든지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며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 대상자에 대해서 감세를 많이 해줬지 않느냐. 그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성주 기자

8박9일의 필리버스터 막내려
정치사 한 획 긋다
야권 39명, 테러방지법 문제 지적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일 정치사에 한 획을 그으며 9일만에 막을 내렸다.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서 시작돼 총 192시간 30여분동안 계속됐다.

첫날 더민주 김광진 의원부터 마지막 토론자였던 이 원내대표까지 야 39명에서 총 39명의 의원이 발언대를 거쳐 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81분간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토론을 끝낼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39번째이자 무제한 토론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 원내대표는 앞서 토론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합법적 의사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는 제헌국회 때 규정됐다가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사라졌다. 이후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야당에서는 39년만에 부활한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자평했다.

유례가 없던 한국의 필리버스터 기록이 쏟아지자 의신들도 관심을 나타냈고, 날을 거듭할수록 일반 방청객들이 심회를 찾아 필리버스터를 직접 지켜보는 장면도 연출됐다. 본회의장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렇게 끝 모를 것 같았던 필리버스터는 더민주가 지난달 29일 심야 비대위를 열어 중단기로 결정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민주는 당초 1일 중으로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전날 의총을 통해 계획된 토론자의 발언까지는 계속키로 했다.

지속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 속에서도 내 부적으로 계속 지속했다는 총선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끝을 맺게 됐다.

/이성주 기자

사회양극화현상 해소 방안은 '777'

더민주, 가계소득 70% · 노동소득분배 70% · 중산층 70% 플랜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 방안으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발표회를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소득계층간 격차, 가계와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크게 약화됐다"며 이를 제안했다.

'777플랜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 대로 높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70% 대로 높여 사회 중산층 비중을 70% 대로 높여겠다는 목표를 담은 슬로건으로, 더민주를 이룰 위해 불평등해소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 ▲가계·기업 소득배분 시

스템 개선 ▲생활임금제의 민간기업 적용 ▲최저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상향 ▲8동(同)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법제화 ▲보수공시제도 개선 추진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불평등해소위원회'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는 역할을 하게 될 전담부서로, '777플랜'을 최우선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당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의 경우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시켜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치 중심 양적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창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먼저 3일에는 군산시, 익산시선관위, 4일에는 정읍시, 김제시선관위, 8일에는 남원시선관위, 9일에는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완주군선관위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거운동방법, 달라진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후보자등록을 오는 24~25일까지 2일간 국회의원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받는다.

/신명영 기자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잠적장르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